광주시 '민관합동 워크숍' 소통행정 모델됐다

10여년간 추진… 민관협력 분야 최우수상

타 자치단체·중앙 정부 벤치마킹 잇따라

광주시가 시민 아이디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추진해온 '민관합동 정책워크숍'이 타 자치단체는 물론 중앙 정부까지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민관소통'의 성공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시민과의 소통 행정'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민선 5기 들어 민관합동 정책워크숍의 지원을 확대하면서 민관협력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인 '지방 3.0'의 선도 과제로 선정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민관협치(協治)' 제도로도 각광받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에도 지난 1월부터 9개월 동안 '마을과 나, 광주공동체'를 주제로 자치행정 등 7개 분야에서 71개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한 연구기관,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등이 발굴·건의한 지역 발전 정책 23건 중 15건을 수용·추진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올해 발굴·건의한 대표 사업은 ▲광주형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사회적 경제활성화 기금 조성 ▲작은 도서관 지원센터 설치·운영 ▲문화 예술인 지원을 위한 메세나법 제정과 예술인 지원 광주 문화사랑 카드제도 도입 ▲아동시설 환경보건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조사 등이다.

또 ▲광주녹지공유화시민재단 설립 ▲광주생태하천시민협의회 구축 ▲생태교통 체계 마련 ▲보행환경 모니터링 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 지원 강화 및 인건비 지원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센터 신설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이들 사업이 모두 추진되기 위해서는 560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광주시의 '민관합동 정책워크숍'은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가 서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토록 자율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민관협력 우수사례 전국 공모대회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올해는 민관합동 정책워크숍의 2014년도 주제인 '시민 아고라 500(시민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 500명이 심사·채택하는 제도)'이 안전행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방 3.0 선도과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민관합동 정책워크숍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서울, 경기, 충북, 제주 등 전국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해 시행중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시민의견을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시민과의 대화, 광주공동체 원탁회의, 민관합동 정책워크숍, 시민참여예산제, 을을 위한 직소민원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시민이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민관합동 정책워크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24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상록회관에서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광주시 민관합동 정책워크숍 폐막식을 갖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전두환 취소 훈장 9개 반납

환수절차 진행 7년만… 노태우는 아직 반납 안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보유한 훈장 9개를 정부에 자진반납했다. 2006년 훈장이 취소되고 나서 환수 절차가 진행된 지 7년 만이다.

2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06년 취소된 훈장 9개를 지난달 8일 자진반납했다. 반납한 훈장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등 12·12 군사반란 이후부터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에게 수여한 훈장이다.

검찰은 반납 나흘 후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전씨 일가의 비자금 관리 및 재산 증식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전 전 대통령과 달리 노태우 전 대통령은 취소된 훈장 11개를 아직 반납하지 않았다. 정부는 개정된 상훈법에 따라 2006년 두 전직 대통령의 서훈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고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역대 대통령이 퇴임 이후 받는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았다.

정부는 취소된 훈장 환수를 위해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납요구 공문을 보내고 자택 방문을 통해 반납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반납을 거부해 왔다.

안행부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반납한 훈장은 취소된 훈장으로 훈장으로서 명예나 가치가 상실된 것"이라며 "보존의 의의는 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에 보내 보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시민 1인당 채무액

51만3000원

광주시민 1인당 채무액이 51만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6대 광역시 평균보다 적은 액수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시의 채무액은 7532억원으로 재정규모(3조8874억원)를 감안한 채무비율이 20.6%였다.

이 채무비율은 전국 6대 광역시 중 울산(17.7%), 대전(17.8%)에 이어 3번째로 적은 것이다. 인천(35.1%), 대구(32.6%), 부산(30.8%)은 채무비율이 30%를 넘어섰다. 채무비율이 25% 이상이면 주의 자치단체, 40% 이상이면 위기 자치단체로 분류된다.

또, 광주시민 1인당 채무액은 51만3000원이었다. 전국 6대 광역시중 인천시민의 1인당 채무액이 97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82만1000원, 대구 78만5000원, 울산 46만3000원, 대전 41만4000원 등 평균 66만1000원이었다.

광주시의 채무액은 지난 2008년 7993억원으로 민선 5기 들어 302억원이 감소했다. 시는 앞으로 고금리 지방채 2408억원을 저금리로 전환해 이자 100억원을 절감하는 등 채무액 감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광주시 박상백 재정관리 담당은 "지난 5년간 재정규모는 7657억원(24.5%) 증가한 반면 채무액은 5.8% 감소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광주시 남북교류협의회와 광주시·구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이 23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남북 어린이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기자회견에서 내복과 모자 등을 들어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북녘 아이들에 따뜻한 겨울 선물해요"

광주시 남북교류협, 털모자·목도리 보내기 캠페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북한 어린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모자·목도리를 직접 짜서 북한에 보내는 캠페인이 광주에서 펼쳐진다.

광주시 남북교류협의회, 광주시·구 자원봉사센터, 광주재능기부센터, 광주시 청소년활동지원센터는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인도주의 관점에서 '손으로 만드는 평화, 남북 어린이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것은 결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광주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캠페인은 이날부터 약 45여일 간 가정에 있는 털실을 이용해 5~7세용 크기의 목도리와 모자를 만들어 오는 11월 16일 광주시청 행사장에 기증하면 되며, 행사 당일 현장에서 직접 뜨개질을 한 뒤 기증하면 된다.

또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내복 기증과, 각종 행사물품이나 후원금 기탁도 행사 당일 이뤄질 예정이다.

시민들의 정성이 담긴 모자와 목도리, 겨울 내의 등은 북한의 수해지역인 함경북도 안주시 일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참여 문의 전화 (062)613-5606, (062)431-0918, (062)234-0755. /최권일기자 cki@

한·중·일 문화장관, 27일 광주서 회담

동아시아문화도시 선포식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있는 광주에서 한·중·일 문화장관들이 모여 문화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한국과 중국, 일본 문화장관이 27일부터 28일까지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지에서 문화협력 방안 등에 대해 회담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회담은 한국의 유진룡 장관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문화장관, 대표단 등이 참석한다.

유 장관을 비롯한 각국 장관들은 회담장에서 문화전당을 토대로 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열리는 동아시아대회에 맞춰 3개국 문화도시 선포 선언문 등을 공동 발표한다.

문화장관 회의는 올해로 5회째 열리지만, 이번에 광주에서 열리는 데는 남다른 의의가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2015년)을 앞두고 있는 데다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가 내년부터 광주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는 한·중·일 3개국 문화장관의 합의에 따라 각국이 선정한 동아시아문화도시에서 열린다. 한국은 광주, 일본은 요코하마, 중국은 중국 취안저우시를 각각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교학사 교과서 검정 즉각 취소하라"

역사교과서 왜곡 대응위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여야 국회의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 교과서 왜곡 대응위원회는 23일 "교육부가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 축소하고 사실 오류로 국민적 비판을 받은 교학사 교과서 검정을 취소하지 않고 나머지 7종의 한국사 교과서도 함께 수정·보완키로 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교학사 교과서 검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교학사 교과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친일·독재 미화, 사실과 통계오류, 표절 등 문제투성이로서, 역사 교과서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어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은 교과서 왜곡에 대한 비판을 좌파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음모로 매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역사 교과서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교학사 교과서의 즉각적인 퇴출을 위해 광주시민, 국민과 연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訃告

故 朴晟容 錦湖아시아나그룹 名譽會長 夫人
마거리트 클라크 朴 以宿患
二〇十三年 九月 十九日 午前 十一時 四十六分
(美國 現地 時刻 九月 十八日 午後 七時 四十六分)
別世 玆以告訃

殯所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弔問 二〇十三年 九月 二十四日 午後 八時부터
發靷日時 二〇十三年 九月 二十六日 午前 八時
葬地 京畿道 華城市 八灘面 箕川里

子女 박미영 박재영
孫 박준명
媤叔 박삼구 박찬구 박종구
媤妹 박경애 박강자 박현주
同壻 김형일 이경열 위진영 이계옥
媤妹夫 배영환 강대균 임창욱

姪 박철완 박세창 박준경 박건호
姪女 박은형 박은경 박은혜 박세진 박주형 박도윤
姪婦 김현정
姪壻 김선협 장세홍 허재명 최성욱

甥姪 배정철 배승현 배동철 배홍철 강재원
甥姪女 강지은 강지용 임세령 임상민
甥姪婦 김혜경 김현아 유정원 유재신 조혜원
甥姪壻 김유석 한지훈

금호아시아나그룹

連絡處 (02)2227-7550 | 조위금은 정중히 사절합니다.